

유럽적 근대성과 유럽적 가치의 형성

홍 태 영

국방대학교

< 목 차 >

- | | |
|---------------------------------------|-------------------|
| I. 들어가는 말 | V. 사회관계의 민주주의적 구성 |
| II. 근대의 시공간으로서 국민국가 | VI. 맺는 말 |
| III. 정치적 구성으로서 네이션 : 시민, 계급 그리고 민족 | 참고문헌 |
| IV. 국민경제(학)의 형성 | Abstract |

Key words(중심용어): 유럽(Europe), 근대성(modernity), 서구중심주의(eurocentrism), 문명화(civilization), 국민국가(nation-state), 민주주의(democracy), 시장(market)

국 문 요 약

이 글은 19세기 유럽에서 형성된 근대성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근대 국민국가라는 시공간이 자본과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였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 보는 유럽의 근대는 우선은 19세기 말 우리가 전면적으로 접하기 시작한 유럽의 모습을 말하며, 19세기를 통해 형성된 유럽의 모습이자 동시에 그것은 유럽이 제국주의적 침략을 행하면서 식민지에 이식하고자 했던 자신들의 가치이기도 하였다. 유럽적 근대성과 그 가치들이 제3세계에 이식되는 기저에 깔려 있는 사고는 당연히 ‘서구중심주의’였으며, 그에 기반을 둔 ‘문명화 과정’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럽은 단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이다.

이 글에서 보고자 하는 유럽적 근대(성)의 내용은 크게 시장, 국가, 사회적인 것의 민주주의적 구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형성된다. 그것은 각각 경제, 정치, 사회라는 근대사회의 세 가지 축을 이루면서 근대적 방식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현재의 시점에서 유럽적 근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것은 유럽적 근대성의 한계 상황과 관련된다. 지구화의 논리 속에서 자본주의의 국민국가적 틀, 민주주의의 국민국가적 틀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축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럽적 근대성과 유럽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이 글의 목적으로 한다.

I. 들어가는 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국민국가라는 틀은 한반도에서 근대 이후의 산물이다. 즉 1876년 개항과 함께 서구문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중화주의적 질서에서 만국공법의 질서로 변환된 이후 만들어진 공간이다. 급격하게 유입된 서구문물은 무엇보다도 전통적 정치질서를 유럽적 근대 정치사회질서로 탈바꿈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해방 이후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남한은 다시 서구의 질서를 거의 아무런 여과 없이 다시 수용하였다. 그것은 강대국의 논리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규범적 가치의 절대성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그리고 이후 60여년이 지난 지금 서구의 정치사회질서 그리고 경제적 질서로서 자본주의는 남한에 안정적으로 정착된 듯 보인다. 1987년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그 이후 공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달에 있어서도 개발도상국에서 성공적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려 한다는 점 역시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오히려 예외적일 정도로 한국은 정치와 경제 두 부분에서 성공신화를 이루어냈다. 1990년대 IMF 사태를 맞기도 했지만 그 역시 성공적으로 극복한 듯 보였고,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잘 적응한 듯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이러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근대의 정치사회 그리고 경제 질서를 그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재편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무엇보다도 근대 국민국가라는 공간을 통해 이루어져 왔던 자본과 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축이 근본적인 변화의 국면에 들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성은 아직 불분명하다. 근대(성)라고 하는 하나의 순환이 종결되고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는 듯하지만 그 순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근대의 국민국가라는 시공간이 자본과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였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러한 커다란 주제를 규명하기 위해 근대의 역사를 재구성한다거나 그것들의 인과관계의 연쇄를 파악하려 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의 우리의 시공간의 이해를 위한 단초의 작업으로서의 의미만을 파악하고자 한다.

유럽에서 형성된 근대(성)의 양식은 다양한 측면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학문의 영역에 따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다를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유럽의 근대는 우선은 19세기 말 우리가 전면적으로 접하기 시작한 유럽의 모습을 말하며, 19세기를 통해 형성된 유럽의 모습이자 동시에 그것은 유럽이 제국주의적 침략을 행하면서 식민지에 이식하고자 했던 자신들의 가치이기도 하였다. 유럽적 근대성과 그 가치들이 제3세계에 이식되는 기저에 깔려 있는 사고는 당연히 ‘서구중심주의(Eurocentrism)’였으며, 그에 기반을 둔 ‘문명화 과정(civilisation)’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19세기에 등장하는 유럽적 근대와 유럽적 가치의 특수성이 존재하며, 더구나 식민지 경험을 통해 받아들였던 제3세계에게 그것은 더욱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럽은 단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이다.

유럽적 근대(성)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본다. * 시장, 국가, 사회적인

* 19세기를 이러한 방식으로 바라보는 견해들은 몇 가지 편차들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경제의 분리, 사회

것의 민주주의적 구성이 그것이다. 그것들은 각각 경제, 정치, 사회라는 근대사회의 세 가지 축을 이루면서 근대적 방식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축이 국민국가라는 틀과 국민국가들의 체계를 형성시키는 과정에서 국가(권력)가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현재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의 위상과 그 의미를 이해해 보기 위함이기도 하다. 현재의 시점에서 유럽적 근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것은 유럽적 근대성의 한계 상황과 관련된다. 근대성 자체의 한계이자 보다 구체적으로 유럽적 근대성의 한계가 보이는 시점이다. 근대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으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위기 상황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세계화라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지구화의 논리 속에서 자본주의의 국민국가적 틀, 민주주의의 국민국가적 틀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가져왔다. 근대적 국민국가의 위기가 제기되고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럽적 근대성과 유럽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 근대의 시공간으로서 국민국가

근대의 시공간으로서 국민국가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갖는 역사특수성이다. 국가(state)가 결코 일반적인 개념이라는 보다는 특정한 역사적 위기, 즉 봉건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등장한 역사적 산물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B. Badie et P. Birnbaum 1981). 그러한 이해는 국가를 근대국가로 제한하여 이해하면서 기존의 다른 정치공동체의 형태와 구분지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경우 네이션이라는 민족형태 역시 특정한 근대적 산물로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는 국민국가로서 존재하는 것이 된다. 국민국가라는 형태가 그 모습을 갖추고 유럽적 질서 형성의 주체가 되기 시작한 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이

적인 것에 대한 상대적 독립성 등이라는 커다란 틀에서는 유사성이 있다. 폴라니는 19세기 문명이 네 가지 제도 - 세력균형체계, 국제금본위제, 자기조정적 시장, 자유주의국가 - 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K. Polanyi(1997), 『거대한 변환』, 박현수 역, 민음사). 테일러 역시 경제, 공론장, 인민주권이라는 근대적 제도가 19세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구성되고 제도화되었는지를 추적하면서 현재를 이해하고자 한다(Ch. Taylor(2010),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상길 역, 이음). 아리프 딜릭은 유럽중심주의의 내용을 ‘경제적인 것’ -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들, 시장과 생산양식들, 제국주의 등, ‘정치적인 것’ - 민족국가와 민족형태의 체계 - 가장 중요하게는 세계의 새로운 법적 형태 등을 재배치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조직들, ‘사회적인 것’ - 개인에 기초한 사회형태들의 추진을 비롯하여 계급, 성, 인종, 종족성 그리고 종교적 형태의 생산, 그리고 ‘문화적인 것’ - 공간과 시간의 새로운 개념, 좋은 삶이라는 새로운 개념, 그리고 생활세계에 대한 새로운 발전지상주의적 개념 등 - 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A. Dirlik(2005), 『포스트모더니티의 역사들』, 황동연 역, 창비, p.124). 고진은 자본제경제, 국가, 네이션이라는 세 가지 축이 서로 보완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의 결합이 19세기 후반 선진 유럽 국가에서 확립되었다고 본다(가라타니 고진(2009), 『네이션과 미학』, 도서출판b, p.27). 이 글에서는 이들의 연구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국민국가라는 틀 그리고 국가권력의 주도 속에서 그러한 구성요소들이 결합되고 있음을 주목하고자 하였다.

다. 하지만 근대국가의 형태가 출현하고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훨씬 이전이다.

찰스 틸리에 따르면, 1500년경 유럽에는 ① 분산적인 봉건적 지배의 지속 ② 새로운 분산적인 도시 사이의 네트워크, ③ 기독교에 의한 신성한 연방제, ④ 정치적 제국, ⑤ 국가간 시스템이라는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다섯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C. Tilly 1975). 하지만 19세기의 지도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 신성로마제국은 1806년에 없어졌고, 제노바, 베네치아와 같은 오래된 공화국들도 1797년에 사라졌다. 쾰른, 마인쯔, 잘쯔부르크 등과 같은 자유도시도 거의 사라졌다. 이러한 변화의 길목은 프랑스혁명전쟁과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프랑스는 병합, 강화조약, 국제회의 등의 방법에 의해 계획적으로 독일 정치지도의 개편을 기도했고(1797-98년과 1803년), 그 결과 신성로마제국의 234개의 영토가 40개로 줄어들었다(E. Hobsbawm 1983, 131). 그리고 프랑스혁명과 그 전쟁이 가져온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의미에서 국민(nation)의 탄생과 그것을 통한 정치체의 구성이었다.

프랑스 혁명은 19세기를 여는 역사적 계기로써 국민의 탄생과 더불어 절대주의 시대 이후 발전해온 근대국가체제와 국민의 결합을 이루어낸다. 즉 국민주권 개념과 서서히 구체화되는 민주주의라는 매개를 통해 국민국가를 형성시켜 나간다. 그와 함께 자본주의 경제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즉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적인 것이라는 3중적인 체계가 국민국가라는 틀을 통해 작동할 수 있는 계기를 이룬 것이다. 이러한 근대성의 구성요소들이 체계화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이 19세기에 이루어졌고, 그것은 경제, 사회, 정치의 부문에서 유럽적 근대(성)가 완성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내적 정비를 일정하게 마무리짓고 제3세계로 본격적인 제국주의적 진출에 나섰다.

물론 영국의 인도 식민지 경영의 경우 이미 17세기에 시작되었지만, 국가가 본격적으로 나서 식민지 건설을 주도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이다. 즉 동인도회사를 통한 식민지 경영에서 영국이라는 국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857년 세포이 반란 이후부터이다. 이후 식민지경영 방식에서 변화가 발생한다. 하지만 식민지에 대한 대응의 방식에 있어서는 이미 19세기 초반부터 변화가 발생하였다. 18세기까지 인도에 대한 동인도회사의 접근방식은 인도의 기존 제도를 존중하고 그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19세기 들어서 자유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 그리고 공리주의자들의 개혁이념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좋은 정부와 건전한 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의 활력을 되살리고 개인의 잠재력을 해방할 것을 주창했다. 1833년 매클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명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인종에게든 동일한 정도의 자유와 문명을 부여하는 데 인색하다면 우리의 자유와 문명은 헛된 것이다”(S. C. Smith 2001, 83쪽에서 재인용).

19세기 동안 영국은 식민지 각 지역에 영국의 헌정체제를 수출하였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각 주는 1791년 헌정체제법을 기안하여 총독과 행정참사회, 입법참사회 그리고 선출된 의회를 지니게 되었는데, 그것은 영국의 군주와 행정부, 상원 그리고 하원에 상응하는 것이었다(S. C. Smith 2001, 47). 특히 1846년 영국 자체 내에서 책임정부제 - 내각을 해임할 수 있는 주체가 군주가 아니라 하원이라는 원칙 - 가 확립되자 성숙한 식민지에 대해 그러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시킨

다. 예를 들어 1856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식민지들과 뉴질랜드가, 1867년에는 캐나다 연방이 책임정부제의 권리를 획득하였다.

프랑스의 알제리 점령은 1830년 복고된 왕정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인 식민지 개척이 이루어진 것은 19세기 말 제3공화국과 함께이다. 식민화의 작업은 문명을 전파할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며, 그것은 조국의 영광을 실현하는 애국주의적인 정책임을 분명히 하였다(Ch-R. Ageron 1985). 알제리는 프랑스의 웅대함을 노래하는 것이었으며, 북부아프리카로의 제국의 확장은 프랑스의 위대함의 근원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 진출과정은 ‘문명화과정’이었다.* 서구 유럽 국가에 의한 제국주의적 침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들이 내부적으로 국민국가 체계를 확립하고 난 후 부터이며, 이후 식민지 개척의 방식은 자신과 동일한 모습의 자본주의와 그에 맞는 상부구조를 형성시키는 것을 통해서이다. 마르크스는 그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확히 묘사하였다.

“부르조아는 ... 가장 미개한 민족들까지도 문명 속으로 끌어넣는다. 부르조아 상품의 싼 가격은 부르조아가 모든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고 외국인에 대한 야만인들의 완고하기 그지없는 증오심을 굴복시키는 중포(重砲)이다. 부르조아는 모든 민족들에게 망하고 싶지 않거든 부르조아의 생산양식을 채택하라고 강요한다. 그들은 소위 문명을 도입하라고, 즉 부르조아가 되라고 강요한다. 한마디로 부르조아는 자신의 이미지대로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K. Marx 1990, 404)

이러한 유럽 중심주의는 근대성의 맥락, 즉 유럽에서 근대성의 확립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유럽의 형성은 근대성의 형태를 확정짓고 결정짓는다는 측면에서 장기 역사과정의 끝마무리였다. 근대국가와 자본주의 양 측면에서 19세기 동안에 이미 16세기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발달 그리고 영토국가에서 시작된 근대국가의 모습이 완벽하게 드러난다. 근대국가와 자본주의 체계를 구성하는 인간구성원들의 사회라는 것이 새롭게 조직된다. 이렇게 구성된 유럽은 제국주의의 진출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제3세계에 이식하면서 자기와 동일한 모습을 만들어낸다. 동일한 정치체로서 국민국가,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구성하는 자본주의가 그 근간을 형성하였다. 유럽 제국주의의 제3세계로의 진출은 유럽적 가치체계의 보편화 과정이었으며, 유럽의 전지구화였다. 그리고 사실상 그 기저에는 유럽자본주의가 그 동력이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유럽중심주의 시각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에게서도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즉 영국의 인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 중국과의 아편전쟁, 등 서양의 동양 침략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정체된 아시아 사회에 대한 자본주의적 진보를

* 물론 보편주의에 기반을 둔 문명화과정은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보편주의 전통은 이미 기독교이래 계몽주의를 거쳐 자리 잡고 있었다. 유럽인들이 다른 대륙으로 진출하면서 제시한 보편주의는 기독교의 수용을 통한 합리성이었다. 그것의 거부는 야만적인 비합리성이었다. 따라서 인권개념 역시 ‘백인’과 ‘비백인’에 대한 구분에서 출발한다. 그에 대한 흥미로운 탐구로 C. W. Mills(1997) 참조. 계몽주의 시기 보편적 휴머니즘을 유럽과 식민지 관계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저작은 레날의 책(Abbé Guillaume-Thomas Raynal. *Histoire philosophique et politique du commerce et des établissements des Européens dans les Deux Indes*(『두 인도의 역사』)이다. 또한 프랑스의 인권선언이 갖는 보편주의의 인종주의적 한계에 대해서는 C. L. R. James(2001), 『블랙 자코뱅』, 우태정 역, 필맥. 참조.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용인되었다. 동양적 전제정 속에서 전제군주에 의한 토지의 독점, 촌락공동체 내의 농업과 수공업의 결합,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식 도시의 결여 등을 아시아 사회의 특징으로 간주하면서 아시아 사회의 정체(停滯)의 요인으로 강조되었다(임지현 1994). 이러한 아시아 사회에 대한 인식은 계몽주의 이래 아담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등의 인식을 공유한 것이었다. 나아가 그러한 사고가 근대의 진보라는 관념에 대한 강한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진보에 대한 믿음은 근대의 출발점부터 내재되어 있던 근대의 기본적인 가치이다. 월러스틴이 지적하였듯이 19세기의 대표적인 세 가지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 사회주의, 보수주의 모두 진보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다(I. Wallerstein 1996). 이러한 유럽적 근대성은 19세기를 거치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20세기의 역사, 특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규정하였다. 20세기에 구현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그들의 경쟁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세기 동안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양진영의 무기 경쟁은 생산력 경쟁의 다른 형태였으며, 그것은 19세기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계의 효과였다. 1917년 러시아의 혁명은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구체적인 실험과 실현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제정책을 실험하면서 레닌은 사회주의는 곧 테일러주의와 노동자통제를 결합시킨 것일 뿐이라고 말하였다(V. I. Lenin 1991). 신경제정책 속에서 전기화는 기술적인 프로그램이자 정치적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국가전기화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전기화는 경제의 재건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 나라를 서유럽의 가난한 사회에서 전기와 라디오가 가득 찬 근대적이고 문화적인 사회로 탈바꿈시킬 것이다”(S. Buck-Morss 2008, 174에서 재인용). 신경제정책 속에서 근대적 과학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들은 자본주의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존재했으며, 다만 소유권의 노동자 혹은 노동자 국가로의 이전이라는 단서만 존재할 뿐이었다. 스탈린에 의해 강력히 추진된 산업화, 일국사회주의론 그리고 테일러주의를 대체한 스타하노비즘은 1930년대 소비에트 노동의 모델이 되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서구 따라잡기”는 자본주의와 동일한 맥락에서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다(S. Buck-Morss. 2008, 167). 진보의 이데올로기는 20세기의 지구사를 지배하였다.

Ⅲ. 정치적 구성으로서 네이션 : 시민, 계급 그리고 민족

국민국가(nation-state)를 구성하는 그 층위로서 네이션은 주권자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비록 이전부터 네이션이라는 말이 존재하긴 했지만 네이션이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서 등장한 것은 1789년 프랑스혁명부터이다. 스스로 주권자로서 선언하면서 정치적 권력을 기존의 군주로부터 네이션으로 이동시킨 사건이 프랑스혁명이다. 프랑스혁명과 함께 네이션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였고, 그 네이션의 의미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과정이 프랑스혁명의 역사를 채웠다. 즉 1789년 바스티유 점령으로 상징화되는 혁명의 시작은 이후 입헌군주제, 루이16세의 처형과 공화국 선포, 공포정치, 혁명전쟁, 테르미도르 등을 거치면서 네이션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구성해 가

는 작업이 진행되었다(홍태영 2008). 혁명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네이션은 구체적인 인민이라기 보다는 ‘이성’ 혹은 ‘덕성’에 의해 통제되고 순화된 추상적인 집단으로 간주되었다. 외부의 다른 네이션과의 구별을 강조하기 위해 내부적 통일성이 끊임없이 강조되었고, 그러한 단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1789년에 시작된 장기의 19세기는 자유주의의 세기이기도 했지만, 또한 민족주의의 세기였다. 통상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라는 단어가 통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하지만 1789년 프랑스 혁명과 함께 시민권(citizenship)의 조건으로서 국민권(nationality)이 요구되면서 네이션의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 발생하였고, 국가들 간 전쟁과 함께 네이션을 동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애국주의는 서서히 내셔널리즘으로 변화되어 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이션을 구성하는 시민의 상(像)은 다양하게 그려졌다. 무엇보다도 자유, 평등, 형제애라는 혁명의 대의와 함께 애국심에 근거한 시민의 상은 특정한 시점에 잠깐 내비칠 뿐이었고, 혁명전쟁의 와중에서 타자인 외국인과의 경계를 뚜렷이 하는 시민의 상이 지배적이 되어간다. 사실 애국주의는 비록 그것이 자유와 덕성을 그 구성요소로 할지라도 이미 배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볼테르는 ‘훌륭한 애국자가 되는 것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적이 되는 것’이라고 결론지은 적이 있었다(J. Godechot 1971, 487에서 재인용). 그러한 의미에서 볼테르는 코스모폴리탄이 되고자 하였다. 하지만 루소는 애국심의 배타적 성격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국에 대한 사랑이 인간을 덕성스럽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강조하였다(J. J. Rousseau 1964, 255-256). 사실 마키아벨리 이래 공화주의 전통으로부터 유래한 애국주의의 언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인민이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고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였다(M. Viroli 1995, 106-107). 구체적인 자유의 실현을 위해 애국주의는 국민 문화와 결합할 필요성이 있었다. 국민문화에 기반한 애국주의는 자연스럽게 19세기 동안에 민족주의로 전환되었다.**

민족주의가 막 탄생한 국민을 국민/주체로 만드는 작업에 치중했다면, 자유주의는 국민을 구성하는 개인을 시민/주체로 만드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프랑스 혁명 속에서 등장하였던 공화주의적 시민의 상(像)과 애국주의적 문제의식은 19세기를 통하여 자유주의적 시민과 민족주의로 대체되는 경향을 띠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르크스가 「유대인문제」에서 ‘인간의 권리’란 “시민사회 구성원의 권리, 즉 인간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이기적 인간의 권리에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명제를 제시하였을 때,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었다. 그러한 명제에 대한 증명은 마르크스 자신보다는 오히려 토크빌 그리고 아렌트에 의해 이루어졌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 사회를 관찰하면서 발견하였던 개인주의적 성향의 대중들의 모습은 ‘조건들의 평등’으로 이해한 민주주의의 모습이었고, 평등한 권리를 지닌 시민들의 모습이었다(A. de Tocqueville 1961). 그때의 인

* 프랑스어에서 내셔널리즘(nationalisme)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798년이지만 광범위하게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1860년 이후이다(J. Godechot(1971), “Nation, patrie, nationalisme et patriotisme en France au XVIIIe siècle,” *Annales Histor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43 oct-déc, p.482).

** 프랑스의 혁명 전쟁 그리고 뒤이은 나폴레옹 전쟁은 유럽 전역에서의 민족주의를 자극하였다. 역사, 언어, 문학, 종교 등 문화적 단일성에 근거한 네이션 개념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예는 당연히 유럽에서는 독일이다. 피히테, 헤르더 등의 민족주의는 그들 간의 분명한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민족주의가 우선이다. 그들에서 조국이라는 개념 역시 문화적 단일성에 근거한 것이다.

권은 부르주아 사회의 자기중심적 개인의 권리에 불과한 것이었다. 아렌트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원자화된 개인들을 통일시키고 집중화시키는 것이 민족주의라고 보았다(H. Arendt 2006, 433). 토크빌 그리고 아렌트가 보기에 현대 민주주의의 사회는 그러한 사적인 개인의 상업적 이해의 추구에 집중하는 사회였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권리가 바로 ‘인권’이었다. 하지만 그 둘 모두 우려했고 실제로 경험했던 것은 ‘민주주의적 전제정’ 혹은 ‘전체주의’라고 불렀던 거대한 권력체의 출현이었다.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발전과 더불어 19세기의 주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노동자계급의 형성이다. 톰슨(E. P. Thompson)이 19세기에 들어서 1832년을 끝으로 책을 마무리 지으면서 ‘노동자계급의 형성’을 보았을 때 그것은 분명 의미 있는 숫자였다. 이미 폴라니가 말했듯이 1832년 스핀햄랜드 법의 폐지와 함께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자계급이 출현했다고 보았던 시점이기도 하다. 영국의 어느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국민적 정체성이 일찍 발달하였다. 그것은 이미 프랑스 혁명 이전 두 개의 혁명을 거친 후, 국교회문제로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을 경험하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영향 등으로 ‘국민’이라는 개념이 갖는 진보적 의미와 더불어 노동자계급의 형성 과정이 맞물려 존재하였다. 국민과 계급의 형성은 어느 하나로 환원되거나 어느 하나에 의해 규정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에게 내재한 정치적 모순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B. Jenkins 2010). 분명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기의 영국에서 노동자의 형성과 국민의 형성과정은 대립적이기보다는 “동일한 역사적 과정의 두 측면”이었다(L. Colley 1986).

이미 프랑스혁명이 추구했던 전제정에 대항하는 유럽국민의 해방이라는 관념은 ‘국민’을 정치적 주체로 형성하는 작업이었고, 그것은 동시에 노동자계급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홉스봄의 표현대로 1848년은 ‘국민들의 봄’이었고, 국민들의 자기주장이 유럽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강하게 제기되었다(E. Hobsbawm 1983). 국민들이 국민국가 체계로 전환되어 가면서 국민은 정치적 동일성을 가진 실체로서 등장했지만, 동시에 역사적, 문화적 존재로서 의미를 획득해 나갔다. 그것은 국가에 의한 위로부터의 작업이면서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작업이기도 하였다. 1848년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에 나타난 국제주의적 원칙선언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의식은 내셔널리즘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혁명 그 자체의 전통이 국민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국민적 문제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이다(E. Hobsbawm 1993, 144).

홉스봄의 표현대로 국가는 “시민들이 국가와 경쟁하는 설교자들에게 기울기 전에 새로운 시민 종교로 개종”시킬 필요가 있었다(E. Hobsbawm 1994, 117). 이 시점은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1864년 제1인터내셔널이 성립되면서 노동자 국제주의가 현실화되는 듯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독일과 이탈리아가 통일을 이루면서 유럽의 국민국가들 간의 경쟁의 시대가 본격화된다. 1870년대에 들어서 유럽 각국에서는 국가에 의한 ‘국민만들기’ 작업이 구체화된다. 영국의 경우 선거권이 확대되고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되었고, 프랑스 역시 1883년 초등교육의 의무, 무상, 세속화의 원칙이 채택되었다.

19세기 동안 프랑스 민주주의의 형성 과정 혹은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이 진행된다. 이 과정

은 다양한 축을 통해 진행되는데, 우선은 민주주의적 제도의 형성과정, 예를 들어 선거권의 확대과정, 정치적 권리의 확장, 대의제의 확장과정 등을 포함한다.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19세기의 과정은 민주주의의 내용으로서 국민주권의 확정이며, 또한 그 국민으로 만드는 과정으로서 민주주의적 국민문화, 민주주의적 국민의 형성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주의적 국민의 형성과정에서 국민적 문화,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틀이 만들어진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적 문화를 통한 민주주의적 국민의 건설과정이다. 18세기가 비판의 세기였다면 19세기는 “민주주의를 교육시킨다”는 의미에서 “공민적 세기(siccle civique)”였다(F. Mélonio 1998).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19세기 동안 적어도 1880년대까지 지속되었고 1789년에 시작된 혁명적 열기가 전환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18세기 프랑스의 보편주의적 문화는 민주주의적 국민문화로 전환된다. 특정한 계급의 습속이 아니라 국민의 습속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인권선언」과 이후 과정에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면서 확정된 민주주의적 시민들로 구성된 네이션의 동질화 작업이 그것이다. 그것은 시민으로서의 동질화 작업으로서 그것을 통해 네이션 내부의 통일을 이루는 작업이었다. 네이션의 내부적 통일을 만드는 작업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작업이었고, 그것은 상상의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상상의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프랑스라는 영토적 경계 내에 동질적인 문화를 기입하는 것이다. 내부적인 문화적 동일성을 만들면서 외부적으로 이웃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작업이 그것이다. 공통의 습속을 만들어내고, 공통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것은 지역의 특수한 습속, 혹은 특정한 계급의 특수한 습속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교육자, 시인, 역사가, 화가, 문학비평가가 되면서 민주주의의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다.

IV. 국민경제(학)의 형성

아담 스미스 이전 중상주의 시대에 경제발전은 영토국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제 19세기에 들어서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유무역 시대를 제창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영국에서 강하였고 프랑스에서 약간의 반향이 있었을 뿐이었다. 아담스미스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은 19세기 동안에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상하는 학문이자 이데올로기였다. 이에 대비되어 리스트는 국민경제학을 제시하였고, 마르크스는 자신의 『자본』의 부제를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라고 명명하였다. 경제단위를 바라는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은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경우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민사회의 자율에 대한 이상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비록 그 이유와 목표가 정반대이긴 했지만 말이다. 반면에 리스트는 이제 관세동맹을 통해 겨우 통일된 시장을 갖기 시작한 독일에서는 ‘국민경제(학)(Nationaloekonomie)’에 대해 언급하였다.

물론 리스트가 국민경제학의 과제로 본 것은 ‘국민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미래의 보편적 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리스트는 국민이 갖는 특수한 정치제도, 문화, 관습 등과 같은 고유성에 기반을 둔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F. List 1998). 그 과정에서

국가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 국민경제를 보호해야 하며,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리스트는 스미스와 세(J. B. Say)로 대표되는 자유주의경제학자들이 시장을 세계주의적 관점에서만 고려할 뿐 정치적 관점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비판하였다.

1848년 혁명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말했듯이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에 출몰하였을 알렸다. 서서히 틀을 만들어가는 국민국가 체제에 대항하여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국제주의를 대립시켰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에서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 국가는 없어져야 할 존재였다. 억압적 국가기구는 단순히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이기 때문이었고, 국민국가라는 체제 역시 노동력과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유럽을 휩쓸었던 1848년 혁명은 유럽에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등장하였음을 의미했다. 19세기 전반기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대립을 넘어서 사회주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또한 동시에 사회주의 세력 내부에서도 분화가 발생하였다. 그것은 각 나라들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드러났다.

프랑스의 경우 1848년 혁명에서 가장 큰 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루이 블랑(L. Blanc)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사회주의적 경향이였다. 프랑스에서 국가가 갖는 독특한 지위, 즉 1789년 혁명을 거치면서 형성된 국가 관념인 일반의지의 실현체로서 국민의 권력이라는 위상 역시 한 몫을 하였다. 1848년 2월 혁명과 6월 봉기를 거치면서 공화국을 준비하면서 충돌했던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노동에 대한 권리(droit au travail)를 둘러싼 논의였다.* 부딪혔던 두 개의 입장은 크게 루이 블랑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의적 입장과 경제적 자유주의의 입장이였다. 두 입장은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 노동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을 둘러싸고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대비되는 견해를 가졌다. 독립작업장 해산을 계기로 시작한 이 논쟁은 1848년 혁명이 또 하나의 기점이 됨을 의미하였다. 자본주의의 발달 속에서 등장한 ‘사회적인 것(le social)’의 탄생은 곧 자유로운 계약의 주체로서 개인들로 환원되지 않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며 그것의 해결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하였다.

루이 블랑을 중심으로 하는 공화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국가가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한 권리가 존재함을 강조하였다. 블랑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권리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질을 개발시킬 수 있는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 속에 있는 것이였다(L. Blanc 1849, 193). 따라서 국가는 “각자에게 노동할 수 있는 도구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노동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이 자연권적 관점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인정된다면, 이제 능력의 관점에서 불평등이 존재하며 그에 대한 국가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였다. 이것은 국가가 특수한 사회 상황을 고려해 법률을 적용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였다. 따라서 기존의 자유주의적 권리의 시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였다. 1848년 6월 독립작업장을 둘러싼 ‘노동에 대한 권리’의 요구는 자본-임노동 관계에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이였고, 소유권의 헌법적 확립에 대한 새로운 해석

* 노동에 대한 권리(droit au travail)는 노동권(droit du travail)과 구별되어 사용되였다. 전자가 노동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 국가에 대한 일자리를 요구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하게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면, 후자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파리의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한 권리’의 인정은 혁명의 대의를 완성시키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 혁명의 결과로서 등장한 공화국에 대한 애국심의 본질적인 근거였다. 블랑 등 사회주의적 경향의 공화파는 국가사회주의적 형태의 공화국을 추구해야 할 체제로서 제시했던 것이다.

반면에 자유주의자는 이미 계약의 자유로운 주체로 구성된 시장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뿐이라고 하였다. 세(J. B. Say)의 영향 속에서 강한 경제적 자유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 자유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였고, 나아가 자유무역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루이 나폴레옹의 대통령 당선과 뒤이은 쿠데타를 통한 제정의 확립 속에서 강력한 후원자가 된다. 대표적으로 슈발리에(M. Chevalier)는 1860년 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들은 경제적 자유주의를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 생시몽주의(Saint-Simonisme)로 무장하고 있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그것을 통한 보편주의 왕국의 건설은 그들의 이상이기도 하였다. 슈발리에에는 철도가 보편적 연합의 가장 완벽한 상징이 될 것으로 보았다. 마르세유에서 파리를 거쳐 베를린에 이르는 기차 길을 통해 유럽연합을 상상하였다. 또한 식민지 개척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슈발리에 등의 자유주의자들이 주목한 것은 1860년대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목할 만한 산업의 발달이었다. 이러한 기반 하에서 잠시 유럽에서 자유무역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1880년대 들어서 이러한 자유무역 협정은 사라졌다.

1848년 이후 자본주의 발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공격은 체제 자체를 위협에 빠뜨렸다기보다 오히려 자본주의 발전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듯하였다. 국가가 단순히 사회 밖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에 서서히 개입하면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그와 함께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유럽에서는 서서히 복지국가에 대한 관념과 실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국가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하부구조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의 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 중의 하나는 자본주의 시초 축적과 그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형성이다. 자본주의 역사를 걸쳐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자유노동자(unfree wage labor) - 노예, 죄수노동자, 계약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 는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유지되어 왔으며, 국가는 그것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미 마르크스가 말하였던 상대적 과잉인구 혹은 산업에 비균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및 세계시장 영역이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상대적 과잉인구의 원천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설동훈 1999, 43). * 자본의 세계화와 더불어 노동력의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노동력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계화 속에서 노동력의 재생산과 관련한 국가의 역할은 결코 쇠퇴하지 않고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외국인노동자들과 관련한 권리의 문제 등은 국가가 그 중심에 있음을 의미한다. 월러스틴은 국가와 자본의 관계는 16세기 이래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화 속에서도 국가의 역

* 노동력의 국제이주와 관련하여 그것의 발생, 영속, 적응의 측면에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고 논쟁 중이다. 이 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그 범위를 넘어선다. 그것들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는 석현호(2003), “국제이주이론의 검토,”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참조.

할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말한다(I. Wallerstein 1995). 그는 19세기 중반 이래 계속된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확대는 그 자체가 세계인구 대부분을 그 권리와 이익으로부터 배제시킴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주장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의 확대는 점점 늘어나고 전투적이 되어가는 자국 내의 노동계급의 선별 흡수의 전략, 즉 복지국가와 인종차별주의에 기반한 이중의 국민 의식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에서 국가의 역할은 그 내용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은 유지된다. 즉 자본주의의 국민경제적 틀 속에서의 재생산에서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은 19세기에 확고해지면서 유지되는 것이다.

V. 사회관계의 민주주의적 구성

1789년 프랑스 혁명 직후 제정된 르 샤플리에(Le Chapelier) 법은 전통 사회에 존재해 온 신분적 굴레들을 제거하고 사회에 개인만을 남기는 조치였다. 이제 개인은 전통 경제의 중심에 있던 길드나 봉건적 장치로부터 벗어나 계약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칼 폴라니가 1832년에야 비로소 영국이 자본주의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강조했던 것은 1832년 스핀햄랜드법의 폐지 때문이었다. 즉 교구로부터 해방되면서 이제 자유로운 계약의 주체들이 탄생한 것이다.

프랑스 혁명과 이후 르 샤플리에 법 그리고 나폴레옹의 민법전을 통해 근대적인 정치적 관계 및 사회경제적 관계 형성의 주체로서 개인이 규정되었다. 그 개인들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질서가 성립되었고, 그것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 역시 작동하였다. 프랑스 혁명사가 소블(A. Soboul)이 나폴레옹의 등장은 프랑스혁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후주였다고 보았던 것은 그가 프랑스 혁명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제도화와 입법화를 통해 합리적인 정리 작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A. Soboul 1983, 233).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민법전(Code civil)의 완성이다. 근대적인 소유체계의 확립으로 상징화되는 민법전은 나폴레옹 전쟁 중의 유럽 전역으로 확대 보급되었다. 사실 흩어져 있는 프랑스의 관습법과 로마법 등을 정리하여 체계화하고자 하려는 의도는 프랑스혁명 전부터 존재하였고, 혁명 직후 특히 1793년 국민공회 시기에 활발하였다. 당시 민법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사회 속의 개인을 위해 충분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산을 갖는 것; 더 큰 이익을 위해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그것들이다”(J. Goy 1988). 이 대원칙은 이후 나폴레옹 법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원칙들을 실현하기 위해 교회와 관계를 전복시키면서 결혼, 이혼, 입양 등 가족관계에 있어 세속화의 원칙을 확립시켰고, 상속, 유언 등 관련하여서는 봉건적 관습과 단절하여 근대적 체계를 확립시켰다. 무엇보다도 민법전의 집필자들이 집중했던 문제는 소유의 문제로 봉건제의 폐지를 통한 토지의 해방이었다. 이것은 프랑스혁명의 성과를 확정하는 것이었으며,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의 기본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자면 두 가지 의미에서의 자유 즉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자유와 신

분적 굴레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한 프롤레타리아에 근거한 자본주의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관계방식을 형성하였다. 19세기는 그러한 의미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전일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관계의 전일화는 곧 자본주의 관계가 사회관계의 전반을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근거에는 동일성의 원리 즉 상품화관계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동일성의 원리가 전제되었다. 토크빌이나 짐멜 그리고 마르크스 모두 19세기에 그들이 바라본 사회는 개인들의 사회 혹은 개인화 그리고 개인주의적 사회라는 특징을 지녔다.

프랑스혁명 그리고 이후의 과정을 본다면 명확한 것은 19세기는 개인들의 세기였다. 스마일즈의 『자조self-help』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그만큼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계약의 당사자이자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자로서 개인 그리고 정치적 행위자로서 개인이 19세기 개인을 규정하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토크빌이 미국 사회를 보면서 파악했듯이 그 개인들을 측정하는 기준은 개인이 소유한 부였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 사회를 보면서 개인주의 그리고 동질화된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무특징적인 사회를 민주주의의 특징으로 보았다. 즉 민주주의 사회의 평등이라는 추동적 사실이 각각의 시민들의 언어를 동질화시키고 또한 문학, 역사, 과학 등에서 단순화 경향들을 가져오며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적 개인들의 습속을 단순화, 동질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토크빌은 그러한 상태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하찮은 존재로서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은 그 자신을 보면서 동시에 그의 동료 인간을 본다.”고 묘사하였다(A. de Tocqueville 1961, 78).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들은 조건의 평등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개인주의를 발달시키지만, 동시에 그것은 진정한 인간성, 개인성(individuality)의 소멸을 가져온다는 것이 토크빌이 본 민주주의 역설이었다(홍태영 2008, 4장). 그리고 그러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정치적인 무관심에 기반을 둔 ‘유순하고’ 강력한 국가, 이른바 ‘민주주의적 전제정’이 탄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토크빌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근대사회의 특징을 진단하였다면, 짐멜 역시 화폐라는 개념을 통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특징과 더불어 약간은 구별되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짐멜은 화폐경제가 가져오는 일견 상충되어 보이는 두 가지 방향성을 주목하였다. “첫 번째가 수평화, 평등화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까지도 동일한 조건 하에 결합 시킴으로써 더욱더 광범위한 사회영역을 창출하는 방향이라면 두 번째는 가장 개인적인 것을 성취하고 개인의 독립성 및 인격형성의 자율성을 보존하는 방향이다”(G. Simmel 2005, 18). 이 두 가지 방향 모두 화폐경제의 의해 유지된다. 짐멜 역시 토크빌과 마찬가지로 화폐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평화, 평등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화폐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의 특징이다. 짐멜은 화폐가 가치 있는 대상들의 상호적인 가치관계를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 교환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주목한다. 결국 화폐는 구체적인 대상들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회적 관계를 화폐를 통해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화폐는 신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화폐가 모든 가치의 절대적으로 충분한 표현과 등가물이 됨에 따라서 그것은 모든 다양한 대상들을 넘어서 높은 추상성의 정도에까지 상승하게 된다. 또한 그것은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대단히 이질적이며, 대단히 멀리 떨어진 사물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상호접촉하는 중심점이 된다. 이와 같이 사실상 화폐는 신과 같이 개별적인 것을 초월하는 고양된 지위를 나타내고 그 지위의 전능성에게 신뢰를 부여하여 준다. 이 신뢰는 지고의 원칙(신)에 대한 신뢰와 유사한 것이다. 그것은 개별적이고 보다 저급한 것을 언제라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언제라도 자신을 개별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G. Simmel 1993, 303-4).

마르크스 역시 화폐의 탄생 과정을 논리적으로 규명하면서 화폐에 의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특성을 묘사하였다. 마르크스는 상품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자본주의 사회적 관계의 특수성 그리고 그 신비함을 상품관계의 물신적 성격으로부터 잘 이끌어 내고 있다. 즉 상품관계의 특수성이 그대로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관계가 상품관계와 동일한 원리에 의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각종 인간노동이 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은 노동생산물=가치라는 동등한 객관성의 형태를 취하며 인간노동력의 지출을 그 계속시간에 의하여 측정하는 것은 노동생산물의 가치량이라는 형태를 취하여 끝으로 생산자들의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실현되는 생산자들 사이의 관계는 노동생산물의 사회적 관계라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K. Marx 1989, 91).

마르크스 역시 짐멜과 같이 화폐가 자본주의 사회의 신의 위상을 점한다고 보았다. “화폐가 단순한 유통수단으로 나타나는 하인의 형태에서 갑자기 상품세계의 지배자이자 신이 된다. 상품들은 화폐의 지상의 존재인 반면, 화폐는 상품들의 천상의 존재를 표상한다”(K. Marx 2007, 212). 이제 화폐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화폐가 진정으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국가 형태가 공고화되면서 외국의 통화들을 자국 영토에서 몰아내고 소액권을 발행하면서 단일한 통화경제를 구축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국지적 범위에서 유통수단으로 등가물로 기능하던 복수의 화폐들은 국가적인 범위에서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고, 조세는 이러한 통합의 실질적인 조건을 제공하였다(이진경 2004, 95; 고병권 2005, 158). 즉 이러한 화폐의 작동은 전국적 행정체계의 발전, 재정기구의 정비, 조세체계의 통합, 중앙은행의 설립 등 제도적 차원에서의 발전과정과 국민정체성의 형성 등 정서적 차원의 발전과정이 맞물리면서 가능해졌다.

VI. 맺는 말

1848년 유럽에서 혁명의 물결이 휩쓸었을 때 등장한 공화주의는 1789년 프랑스 보편주의적 공화주의가 아니었다. 프랑스는 유럽인민들에게 좋은 본보기의 역할이 되는 것에 스스로를 한정하였다. 프랑스 공화주의는 이제 공화국, 민주주의, 그리고 네이션이라는 틀을 통해 실현된다. 1848

년 임시정부의 외교장관 라마르틴(Alphonse de Lamartine)이 임명되고 그는 같은 해 3월 4일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프랑스의 공화국 선언은 세계의 어떤 정부에 대한 공격의 행위가 아니다…군주정이든 귀족정이든, 입헌정, 공화정 모두는 각 인민들의 사이한 성숙성의 표현방식이다…”(Ph. Darriulat 2001, 171-172에서 재인용). 이제 1789년 혁명과 같은 혁명전쟁은 존재할 수 없었다. 1848년 혁명과 함께 등장한 제2공화국에서 형제애(fraternité)는 제2공화국이 순응해야 할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형제애는 민주주의 속에서 시민들을 결합시키고, 외국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애는 인민들 간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원칙이었다. 물론 일부 소수에게 형제애는 국경과 민족을 없앨 수 있는 원칙이었지만, 대부분에게 형제애는 민주주의적 주권국가들 사이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자유, 평등, 형제애는 프랑스만의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 유럽을 재생시킬 수 있는 행위였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서 공화주의자들은 소극적으로 공화주의적, 민주주의적 연방 유럽을 사유하였다. 예를 들어 위고(V. Hugo)는 보통선거권, 사상의 순환, 경제적 순환에 기반을 둔 유럽연방을 꿈꾸었다(N. Savy 1996). 형제애, 연대 등의 도덕적 원칙이 국경이라는 경계에 갇히지 않기를 기대하였고, 그 원칙이 한 나라가 아닌 인류 전체에 적용되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유럽연방과 같은 기대는 사실상 먼 유토피아와 같은 것으로 미루어둔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인 형제애의 원칙은 계약과 인민주권의 원칙에 근거하면서 네이션에 대한 공화주의적 원칙을 확장하도록 하였다. 즉 민주주의와 공화국 그리고 형제애의 실현 공간으로서 네이션이 확장되었고, 그것들의 결합체인 국민국가들 간의 체계로서 국제관계가 사고되었다.

유럽의 근대 속에서 실현된 원칙들은 보편성을 부여받았고, 그에 근거한 유럽의 근대 질서는 유럽에 한정되지 않고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제국주의적 침략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유럽적 가치와 보편의 이름으로 세계를 근대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1789년 보편주의적 공화주의는 유럽에서 구현된 현실이 되었고, 그것은 다시 유럽이외의 지역에 그 보편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개척을 통해 유럽의 근대적 모습을 동일하게 식민지에 이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19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비록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가 끝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미 자본주의적 세계질서에 편입된 세계는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다양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그 규칙들을 바꿔가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식의 작동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면서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질서의 기본은 앞서 보았듯이 국민국가라는 틀을 통해 만들어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질서 체계이다.

물론 19세기가 만들어낸 국민국가적 질서는 20세기 말에 이르러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68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혁명적 물결은 근대질서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행하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근대성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후 1970년대 들어서 경제위기가 진행되면서 안정적으로 보였던 국민국가 틀 속의 복지국가도 위기를 맞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급속히 진행된 세계화는 이러한 위기들에 대한 대응의 형태를 띠고 있다. 19세기의 근대 국민국가적 질서가 위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재편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시티(global city), 혹은 초국적 도시이론(transnational urbanism), 네트워크 사회이론, 제국론 등은 세계화와 국민국가 체계의 위기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글로벌 시티는 국민국가 체계가 출현하기 이전에 활발하게 상업적 거래의 중심을 형성하였던 중세 말 근대초의 상업도시와 유사한 형태이다. 거대한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시티들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자본과 상품의 흐름을 주도한다. 서울 도쿄, 상하이, 뉴욕,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는 대한민국 내의 도시들 간의 연결의 망보다 더 조밀하고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다. 자본과 상품의 흐름이 일국 내 도시들 사이에서 보다 거대한 글로벌 시티들 사이에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거대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들이 만들어낸 체계는 기존의 국민국가들의 체계와 구별되는 특이점들로 인해 국민국가 체계의 위기가 언급된다. 국민국가 체계의 위기는 그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 시공간을 통해 구현된 유럽적 근대성 자체의 위기와 결부된다. 국민국가를 통해 형성된 민주주의, 국민경제, 사회적인 것의 구성 등의 위기이다. 민주주의와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근대성에 대한 비판 속에서 ‘유럽적 근대성’을 상대화하려는 시도가 존재한다. ‘유럽을 지방화하기’, ‘동양적 근대’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유럽적 근대성 혹은 유럽적 가치의 상대화 및 다양한 근대성의 존재를 의미한다.** 현재의 위기 속에서 다양한 공동체의 가능성 그리고 그것의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존 프리드먼(J. Friedman)과 사스키아 사센(S. Sassen)의 글로벌시티이론이나 그를 비판한 마이클 스미스(M. P. Smith)의 초국적도시이론, 카스텔(M. Castelles)의 네트워크 이론,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Empire) 개념 등은 국민국가 체계를 넘어서 등장한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들을 제시하고 있다(S. C. Smith(2001), 『영국제국주의 1750-1970』, 이태숙 외 역, 동문선; A. Negri & M. Hardt(2001), 『제국』, 윤수중 역, 이학사).

** 탈식민주의를 주장하는 차크라바티(Dipesh Chakrabarty)가 사용한 표현이며, 찰스 테일러 역시 그를 인용하면서 유럽의 지방화를 강조하고 있다(Ch. Taylor(2010),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상길 역, 이음, p.296; 히야마 하사오(2000), 『동양적 근대의 창출』, 소명출판; S. N. Eisenstadt(2009), 『다중적 근대성의 탐구』, 임현진 외 역, 나남)

참 고 문 헌

- 고병권(2005). 『화폐, 마법의 사중주』. 그린비.
- 가라타니 고진(2009). 『네이션과 미학』. 도서출판b.
- 석현호(2003). “국제이주이론의 검토.”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 설동훈(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출판부.
- 이진경(2004). 『자본을 넘어선 자본』. 서울 : 그린비.
- 임지현(1994). “마르크스-엥겔스와 민족문제.” 『진보평론』, 10권.
- 한건수(2004). “타자만들기 :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최협 외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 홍태영(2008). 『국민국가의 정치학』. 후마니타스.
- 히야마 하사오(2000). 『동양적 근대의 창출』. 소명출판.
- Arendt. H.(2006). 『전체주의의 기원』1. 이진우·박미애 역. 한길사.
- Ageron. Charles-Robert(1985). “Jules Ferry et la colonisation.” F. Furet(ed). Jules Ferry. fondateur de la République. Paris: Ed de l'EHESS.
- Arrighi, G. & Silver. B. J.(2008). 『체계론으로 보는 세계사』. 최홍주 역. 모티브북.
- Blanc. Louis(1849). “Discours de Louis Blanc, le 29 avril.” E. de Girardin (ed). *Le droit au travail au Luxembourg et à l'Assemblée nationale*. Paris: Lévy frères.
- Chesnais. F.(2003). 『자본의 세계화』. 서익진 역. 한울.
- Colley. L.(1986). “Whose nation? Class and national consciousness in Britain 1750-1830.” *Past & Present*. No. 113.
- Darriulat. F.(2001). *Les patriotes. La gauche républicaine et la nation 1830-1870*. Paris: Seuil.
- Dirlik, A.(2005). 『포스트모더니티의 역사들』. 황동연 역. 창비.
- Eisenstadt. S. N.(2009). 『다중적 근대성의 탐구』. 임현진 외 역. 나남.
- Godechot. J.(1971). “Nation, patrie, nationalisme et patriotisme en France au XVIIIe siècle.” *Annales Histor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43 oct-déc.
- Goy. Joseph(1988). “Code civil.” *Dictionnaire Crit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F. Furet et M. Ozouf dir. Paris: Flammarion.
- Hobsbawm. E.(1983). 『혁명의 시대』. 한길사.
- Hobsbawm. E.(1998). 『자본의 시대』. 한길사.
- Hobsbawm. E.(1994). 『1780년 이래 민족과 민족주의』. 강명세 역. 창작과비평사.
- James. C. L. R.(2001). 『블랙 자코뱅』. 우태정 역. 필맥.
- Jenkins. B.(2010). 『프랑스 민족주의』. 김인중 · 마은지 역. 나남.
- List. F.(1998). *Système national d'économie politique*. Paris: Gallimard.
- Marx, K.(1989). 『자본론』. I.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 Marx, K.(1990). “공산주의당선언.” 『마르크스-엔겔스 저작선집』1권. 김세균 감수. 박종철 출판사.
- Marx, K.(2007).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I. 그린비.
- Mélonio, F.(1998). *Naissance et affirmation d'une culture nationale*. Paris: Seuil.
- Negri, A. & Hardt. M.(2001). 『제국』. 윤수중 역. 이학사.
- Polanyi. K.(1997). 『거대한 변환』. 박현수 역. 민음사.
- Rousseau, J. J.(1964). “Discours sur l'Economie politique.” *OEuvres complètes*, III. Paris: Gallimard.
- Savy, Nicole(1996). “L'Europe de Victor Hugo: Du gothique au geopolitique.” Michele Madonna Mesbazeille. *L'Europe, naissance d'une utopie?*. Paris: L'Harmattan.
- Simmel. G.(1993). 『돈의 철학』. 한길사.
- Simmel. G.(2005). “현대문화에서의 돈.”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 Smith. S. C.(2001). 『영국제국주의 1750-1970』. 이태숙 외 역. 동문선.
- Smith. M. P.(2010). 『초국적도시이론』. 남영호 외 역. 한울.
- Soboul. A.(1984). 『프랑스대혁명사』II. 일월서각.
- Taylor. Ch.(2010).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상길 역. 이음.
- Thiesse. Anne.-Marie(1999). *La création des identités nationales. Europe XVIIIe - XXe siècle*. Paris: Seuil.
- Tilly, C.(1975).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Tilly(ed). *The formation of nation state in Western Europe*. Princenton UP.
- de Tocqueville. A.(1961). *Démocratie en Amérique*, II, Paris: Gallimard.
- Viroli, M.(1995). *For Love of Country. An Essay on patriotism and nationalism*. Oxford: Clarendon Press.
- Wallerstein. I.(1995). “Response: Declining States, Declining Rights?.”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 47.
- Mills, C. W.(1997). 『인종계약』. 정범진 역. 아침이슬.

Abstract

Formation of European modernity and its values.

HONG, Tai-Young*

This study examines how modern nation-state as time-space formed and activated. This aims to understand meaning of modernity which is formed in the 19th century. European modernity is what we confronted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totality of european imperialist values which Europe wanted to implant in the third world. This process of implantation had a base of eurocentrism and 'civilisation'. In this sense, Europe is not only conception of geology, but also cultural conception. This european modernity has three axis: market, state, democracy. These form modern community, in the areas of economy, politics, and society. To reexamine european modernity in this times relates to the situation of its limit. In the globalization, the cadre of nation-state of capitalism and democracy begins to collapse, making democracy crisis. These situations demand new transformation of democracy, in posing problematics of three axis of european modernity. This article aims to comprehend critically signification of european modernity and its values.

■ 논문접수일 : 2011년 2월 20일, 논문심사일 : 2011년 3월 30일, 게재확정일 : 2011년 4월 17일

* Professo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